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구호에 그친 포용적 금융
'자금증개' 역할 사라져
03



Economy

코스피	2248.45 (-34.34)	코스닥	755.65 (-29.16)
금리 (국고채 3년)	2.05 (+0.01)	환율 (USD-달러)	1133.90 (+5.00) (13일)

20년 근무 vs 65세 이상... 국민 울리는 '연금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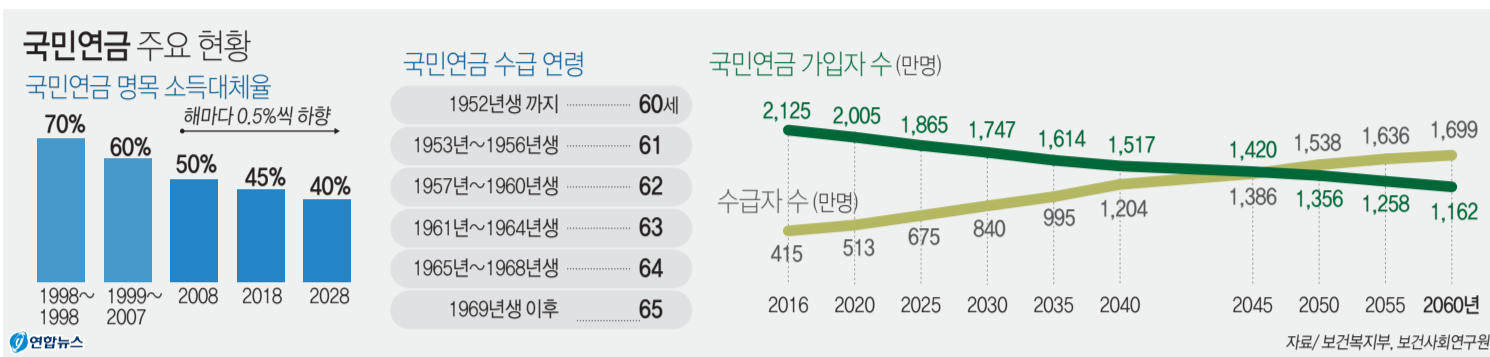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국민연금)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특수지역 공제회 개선 목소리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

사학·공무원연금 부족분 매년 정부 예산으로 보전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무원 등 특수지역 공제회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다' 구조 재편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국민들만 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진다.

지난 주말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도 내년부터 1.8%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검토안은 국민 지급만 터는 '땀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정부안이 되지 않는다면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시키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 "국민연금 폐지"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는 글에서 "국민연금 지급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고 폐지하라! 왜 불쌍한 사람 피갈은 돈을 강탈하여 연금공단 직원들 호의호식하느냐"며 국민연금 폐지와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이라는 글에서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은 경제활동 시기와 맞지 않는 의무가입 기간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 지급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2016년 남성 51.6세, 여성 47.0세였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을 기준으로 65세부터 받게 된다.

반면 군인연금같은 특수지역 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이 국민연금에 비해 빨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요건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퇴직시'다. 10년 이상 가입 조건을 두면서도 65세가 되어야 수급자가 되는 국민연금과 확연히 대조된다.

세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기여금도 내야 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실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기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학연금 역시 현행법에 따라 기금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0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기여

금)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599억원이던 정부 보전금은 지난해 2조28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역시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박탈감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상황 개선 없이 국민연금에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한편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코스피, 터키궤 공포에 덜컥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충격받은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4.34p(1.50%) 내린 2,248.45, 원달러 환율은 5.0원 오른 1,133.9원으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재계 '투자·고용' 바톤 잇는다 270조 풀고 16만 일자리 생산

삼성·SK 등 5개 기업 발표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침체된 경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등의 대기업들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GS, 포스코, 롯데 등도 대규모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자사 핵심 사업 및 신사업에 총 22조원을 투자하고 3만 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에만 130조원을 투자하고 직접 채용으로 4만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이 추진하는 간접채용까지 포함하면 약 70만명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

LG그룹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에 19조원 신규 투자, 1만명 신규 채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SK그룹도 향후 3년간 80조원을 투자하고 2만8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고 4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겠다고 밝혔다. 5개 기업이 발표한 투자금액은 총 274조에 달한다. 동시에 약속한 일자리는 15만8000여개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업정책을 반영하는 분위기가 재계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향후에도 규모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 바톤을 이을 기업으로는 GS와 롯데가 꼽힌다. GS그룹 측은 "현재 주요 계열사별로 투자, 채용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GS칼텍스는 올해 초 2조 6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공장 설비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GS그룹은 해당 사업을 포함해 다른 기업의 분위기를 이어 3~5년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도 내부적으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가 예정돼있어 해당 발표 시기를 조심스럽게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올해 투자액으로 4조 2000억원을 책정했으며, 추가 투자나 고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내년 빅데이터·AI 등 8대 선도사업에 5조 투자

정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나 5년 간 1만명 혁신인재 양성

합해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초연결지능화는 대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공유경제, 수소경제를 더해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자금 지원과 혁신 인재 양성에 내년 1조5000억원을 별도로 투자한다.

내년 하반기엔 학비가 없는 프랑스의 IT기술학교 '에콜 42'를 벤치마크한 '혁신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대 선도사업과 3대 전략분야 투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총 5조원을 투자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8대 선도사업에 쏟기로 한 내년 재정은 올해의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미래자동차에는 7600억원을 각각 투자하며 바이오헬스에도 3500억원을 투자한다. 3대 전략투자 분야 투

자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었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 1900억원 ▲데이터격차 해소와 공유경제 패키지 1300억원 ▲수소 경제 1100억원 등이다.

전략투자 분야는 투자의 시급성과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민간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600억원을 들여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인재를 새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